

2014년 환경정책 주요 추진방향

2014년에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더 많은 국민들에게 더 좋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복지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자 한다. 또한 정보의 공개와 개방으로 국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황 계 영 |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졸업, 미국 위스컨신-메디슨대 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주케냐대사관 환경관,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녹색기술경제과장, 정책총괄과장 등 역임

tel. 044-201-6330 | ghwang12@daum.net



60년만의 청마(靑馬)의 해,
2014년 갑오년(甲午年) 새해의 새날이 밝았다.

올해는 박근혜정부의 2년차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희망의 새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가시적인 성과를 구체화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대내외적인 여건은 올해도 여전히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별로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시련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심각한 재정압력으로 인해 고비용의 환경정책들은 더 이상 수용이 곤란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따라서 환경정책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환경보전 측면에서의 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공정경쟁, 사회적 불평 등의 해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똑똑한 환경규제 (Smart Regulation)"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대통령께서 지난해 환경의 날 기념사에서 천명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환경정책”을 만들어 펼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제대로 된 환경정책”은 단순히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고 경제와 환경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즉 환경도 보전하면서 기술과 경제의 발전도 견인하고 결국 국민의 삶의 수준을 높여주는 정책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설정된 공약과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 2013년에는 그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제2, 제3의 가슴기살균제 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고 위해성 관리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면 개정함으로써 화학 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유사시 효과적으로 수습할 수 있게 되었고 환경부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주무부처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처럼 화평법, 국립생태원법 등 2개 법률을 제정하고 화학물질관리법 등 42개 법률을 개정하는 등 국정과제를 착실하게 입법 조치하는 한편 환경정책을 선진화, 내실화 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2014년에는 지난 해 제 · 개정된 법률들의 취지가 확실하게 반영될 수 있게 하위법령을 꼼꼼히 마련하는 등 차질 없이 후속조치를 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정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환경정책에 충실하게 반영해 나가고자 한다.

먼저, 2014년에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측정망을 확충하고 대기오염 예 · 경보제 항목을 PM_{2.5}와 오존까지 확대하는 등 대기오염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사업장 · 경유차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여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월경성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환경공동체의 건강한 미래 환경을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 · 중 · 일 3국 간의 대기분야 정책대화를 개설하고 3월 하순에 1차 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녹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총

인 등 영양물질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범부처 녹조 R&D 협의체”를 구축하여 녹조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등 국민들께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녹조에 총력을 다해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해서는, 소량 화학물질에 대한 간이등록제도와 취급량에 따른 장외영향평가 차등화 등으로 국민안전을 빈틈없이 보호하면서도 기업들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화평법 · 화관법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는, 더 많은 국민들께 더 좋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복지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자 한다. 농어촌 상수도의 보급 확대로 추가로 16만명이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옥내 급수관 개량(1,920가구), 지하수 수질검사 지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상수도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여가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생태적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생태계의 건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연마당 조성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태보호지역도 8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활 주변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축공동주택과 대중교통차량에 대해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층간소음과 빗공해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리기반 또한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한편 에너지 다소비국이면서 에너지 빈국이고 자원 다소비 국이면서 자원 빈국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여 지속가능국가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의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원과 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는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의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재활용업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15년에 시행예정인 배출권거래제, 저탄소차협력금 등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들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의 구축 등을 지원하고 사회 전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 확충과 국토 생태공간 확충·복원, 정보공개 및 공유 강화로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국토환경관리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환경과 상생하는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50년 묵은 구시대적인 매체별 칸막이 형 배출시설 허가 제도를 혁신하는 국정과제를 착실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번 허가를 받으면 기간의 제한이 없는 현행 허가제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기술의 진보도 반영할 수 없는바, 이를 최상가용기법(BAT)을 적용하는 매체통합허가제로 전환하되 주기적으로 허가를 재검토하는 선진국 형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를 도입하게 되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출공정이나 오염처리기술의 진보를 환경관리에 반영하도록 하여

경제도 살리고 환경산업의 수출산업화도 탄력을 받게 되어 창조경제의 모범사례를 환경 분야에서 만들어 낼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 환경보건 등과 관련된 환경 분야의 新산업을 발굴하고 우수 중소환경기업을 해외수출 기업화하기 위한 지원사업(Green Export 100) 등을 적극 추진하는 등 환경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녹색환경지원센터(18개소)의 "지역 일자리 네트워킹"으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사회적 기업 등을 활용한 양질의 환경일자리 창출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박근혜정부는 정부3.0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1.0은 정책 수요자의 수요를 고려함이 없이 정부 일방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공급하는 것이고 정부 2.0이 수요자의 수요를 수동적으로 받아 정책을 공급하는 것인 반면에, 정부3.0은 정책수요자 개개인의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맞춤형 정책을 공급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환경정책은 전 국민이 정책수요자이며 필요로 하는 정책의 종류도 다양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수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3.0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환경부는 2013년에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정부3.0을 선도해 나갔는바, 2014년에도 정보의 공개와 개방으로 국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